

檢·警 수사권 조정은 시대적 요구

—— 최 인 철 (강원 경우회장)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만 남게 되었다.

간략하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과정을 정리해 보면 해방이후 60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수사권 논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찰을 정권의 시녀로 이용하기만 했다. 그후 겨우 경찰을 외청으로 기관만 독립시켜 간판만 바꿔달고 현재까지 오고 있다. 우리는 최근에 있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공청회 모습을 보면서 쓸쓸한 표정을 지을 수 밖에 없었다.

검찰측에서는 유형업소와 경찰이 유착하여 비리를 저지르면 누가 감시하느냐고 걱정하는 것을 보였다. 그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면 감시기구로 법원, 검찰, 국가인 권위원회, 민간단체 NGO, 언론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경찰이 대대적인 자정대책을 실천하면 극복할 수 있다.

형사사건의 97%를 처리하고 있는 경찰이 그동안 규정되어온 상명하복 수사지휘관계에서 이중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와 수사, 치안업무의 효율성 증대, 견제와 균형, 협력과 경쟁으로 검찰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개혁의 흐름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약속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모든 범죄에 대해 경찰이 검사와 동등한 수사의 주체임을 명시하여 단계적 수사권 독립방안 등의 긍정적 사법개혁을 제시한 바 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민주화의 개혁적 요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젠 국민의 의식도 크게 달라졌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있어서 검

사를 보좌, 보조하는 역할만 주어지고 수사의 주체는 검사로 규정되어 있다.(형소법 제195조, 제196조) 국가 형벌권의 구조는 수사, 소추, 재판, 집행의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최초단계가 국가와 국민이 접하게 되는 핵심적 권한이며 실제적 권한이다. 이 단계에서 구속, 불구속 수사로 구분되어 인신구속 여부가 결정되고 기소나 불기소나 하는 여부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의 개시권과 종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 독자적 영장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고있다. 경찰은 반드시 검찰에 보고하고 검찰을 통해서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수사구조는 당연히 검찰 경찰간에 수직적 상명하복 관계가 이루어지게 됐고 경찰의 자긍심과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요구를 둘러싼 검·경간의 논쟁은 자칫 바그루트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수사단계에서 검·경간의 권한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는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실제적 진실발견, 수사의 효율성 제고, 수사기관의 독립성 확보, 그리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륙법계에 속하는 독일, 프랑스에서는 검찰우위의 수사체계가 확립되어 있고 영·미법계 속하는 영국, 미국에서는 경찰 우위의 수사체계가 정착되어 있다. 다만 검찰은 기소권과 공소유지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간의 관계는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이다.

우리는 이제 합리적인 치안 서비스로 국민을 감동 시켜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 나아간다. 검경간의 수사권 조정은 수사 현실과 법 제도의 불일치 제거,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통한 법치국가 이념의 실현 및 수사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6.25와 5.18 민주화 운동

—— 김 근 배 (인천참전경찰회)

2005. 5. 12일자 동아일보 A면에 실린(과거사 관련예산 1,000억 넘을듯)이란 기사내용을 보고 필자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이 이해가 되지 않아 감히 한마디 제언하고자 한다.

신문기사 내용에 의하면 과거사 관련예산 1,000억원이 민주화운동보상지원 189억,

4.3평화공원조성 등 290억, 일제강제노동규명 189억, 노근리사건위령사업 112억, 친일진상규명위활동 33억 등을 합한 금액이 1,000억이란 내용이다.

그렇다면 6.25때 공산침략을 받고 조국을 수호하겠다고 휴전협정때까지 거의 3년간을 일제때 구식무기인 99식과 38식 총을

메고 광복포에 국방색복들인 군복과 농구화를 신고 전투에 참여하여 김천전투, 낙동강방어전투, 지리산공비토벌전투, 1.4후퇴, 복진 등 수 많은 격전을 겪으면서 장렬히 전사한 전우들의 시체를 남겨두고 전상까지 당하면서 싸웠을 필자는 올분을 참을 수가 없다.

6.25사변은 과거사가 아니라 말인가! 불과 55년전의 일이다. 현정부는 마치 못하여 소위 6.25참전유공자란 명목으로 매월 6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통장, 이장수당도 월 20만원 이상을 지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 6.25참전용사들도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최소한 연금으로 20만원 이상은 지불대우해 주고 과거사관련 예산에 편입증액처리하는 것이 마땅한 조치인 것으로 생각한다. 6.25때 우리 참전유공자들이 조국을 수호했던 첫째 목적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였던 것이다.

5.18민주화운동과 무엇이 다른 말인가. 광주망월동에 고이 잠든 40여명영들과 부상으로 희생당한 투사들이 5.18민주화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6.25때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적인 정신의 뿌리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도 현충일이 되어 지리산 피아골현충당 앞에 서면 격전 당시 전사한 전우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다같은 한국의 아들이들이 조국의 민주화운동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희생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대우와 보존의 차이가 생겼는지 필자가 아무리 생각을 해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을나.

그렇다고 우리 6.25참전용사들이 이마에 붉은띠를 두르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데모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6.25참전 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대우하는 법률상정작업서류에 현국회의원 176명의 날인을 받았다는 소문도 있으나 현국회의원실정으로 보아 부지 하세월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과파심도 생긴다. 앞으로 이 법률통과를 위하여 전국의 우리 6.25참전용사들은 단합하여 공헌한 권리를 찾기위하여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에 감히 제언하는 바이다.

—— 김 광 웅 (중앙회 감사)

지막 치안국장(역임) 선배 회원님의 원고 없는 즉석 축사에서 재향경우회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는 형식적이고, 구호적인 구슬에서 과감하게 탈피, 시대변화에 즉응 회원들의 복지향상에 정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실 때 참으로 뜨거운 고마움과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아니라 15만 경찰을 이끌어가는 하준영 경찰청장도 있는 힘을 다하여 경우회 선배님을 도울 것이라는 늘름한 모습에 전현직간, 선배와 후배간의 간극은 촛보가 없는 하늬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우회라는 거함을 이끌어갈 전국 각 지역의 책임자 300여명은 임기 3년동안 헌신적, 희생적 정신으로 회원들에 대한 봉사활동에 역점을 두고 모든 정열을 다 바칠 것입니다.

경우들이여, 지나온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고 나 스스로를 가다듬고 가정과 건강, 노년기 인생의 재창출을 위한 취업과 자

원봉사활동 등 보람있는 생활계획을 경우회관을 통하여 듣고 싶은 생활정보, 알고 싶은 소식을 알아보며 또 어려운 일, 괴로운 일도 선배와 후배동료들과 만나 보면 풀이될 수도 있는 광장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도 경우회관 "사랑방"이 있어서 외롭지 않고, 마음 든든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며, 마음 속에 담긴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나보다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누구에게나 항상 친절과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웃는 얼굴로, 때로는 손해보는 처신으로 살아가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경우들이여, 경우회 놀이마당인 "사랑방"으로 모임시다.

경우회관 방문이 번거로우면(본인이 거주하는 관내 경우회관) 인터넷에서 한글로 경찰청 또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를 클릭하면 오늘의 경찰모습과 경우회 소식을 모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北核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 서 경 석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인권위원장)

를 행동으로 보여준 바가 없다.

북이 핵보유를 선언해도 한국에서는 분노의 목소리조차 없었다. 핵실험 가능성이 부각되는 요즈음에도 정부여당은 6. 15 남북정상회담 5주년 평양행사와 대선주자인 정동영장관의 평양방문 여부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모습을 보고 북한이 '한국은 핵실험을 해도 강경대응을 절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할 것은 자못可憐하다. 한국정부의 나약한 대응이 북의 핵보유 및 핵실험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정동영 장관은 북이 핵소유를 하게 되면 대선주자는 커녕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한지 모르겠다.

정 장관이 정말로 대통령이 되려면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을 설치하려는 것을 해상봉쇄로 막아낸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같은 결단의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한국은 북을 향해 핵포기를 설득하고 미국에게는 유연한 대북협상을 종용해 왔으나 그 결과는 완전 실패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북에게 단호한 자세를 보여줄 줄 모르는 한국을 북한이 제대로 상대할 리가 없고 한미관계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한국의 말을 제대로 경청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한미공조를 공고히 하면서

북한에게는 핵포기를 안 할 경우 한국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

이제 마지막 수순인 핵실험 단계만 남았다.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다. 핵위협 아래서 연구히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온 국민이 나서서 단호한 행동을 통해 핵포기가 없으면 남북공조도, 대화협력도, 인도적 지원도 전부 없음을 북에게 경고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게도 군사행동은 절대 안 됨을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 이러한 국민적 분노의 표출이 없으면 핵실험을 해도 한국은 따라갈 것이라는 북의 誤判을 막아낼 길이 없다.

북핵을 반대하는 것은 북한주민을 돕는 일이기도 하다. 북핵이 현실로 입증되면 사실상 한국을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북한을 향한 마음의 문이 닫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다시 87년과 같은 대규모 기아사태가 재발하고 수많은 북한주민이 餓死하게 된다.

이 비극을 막기 위해서도 단호하게 북핵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6월에 대규모 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 대회가 한국정부의 대북협상력을 높여주고 한국정부를 비판하는 집회가 되지 않으려면 한국정부는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원손이 한 일

—— 이 재 열 (충남 아산 경우회장)



있다.

젊은 시절을 경찰직에서 봉직하신 노선배님들과 친목모임을 하고 있다. 모임 때마다 건강에 역점을 두고 10,000보 걷기 건강정보교환과 소식다동(小食多動) 등 노년기 심신관리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더불어 몇 잔의 소주로 분위기

를 돋구다 "서로들 건강히 잘 지내다 다시 만나자"고 인사를 나누면서 무엇인지 잊은 것이 있는 듯 아쉬움을 간직한 채 헤어진다.

심지어 공무원 연금지에 소개된 와인 바로알고 제대로 즐기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의 용어해설까지 일상생활에서 알면 편한 문화정보까지 화제로 하는 등 정답 많은 모임이라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하는 모임이다.

이 모임에서는 매년 봄, 가을에 특별회비를 내어 해마다 봄에는 부천에 있는 『노들담수녀원』의 연례행사인 장애인 돕기 진달래 축제에 회원 모두가 참석한다.

그날이 마침 어린이 날이라 회원들도 자기 손자손녀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기를 뒤로 미루고 이날만은 아침

일찍이 시청 앞에 모여 전세버스편으로 즐거운 행사참여자 가벼운 옷차림으로 하루를 보람있게 보낸다. 그날은 노들담수녀원 소나무 숲에서 바지품인 패지족발, 인절미, 빈대떡에 막걸리를 곁들여 점심을 나누고 수녀들의 수고를 위로하고 위문금 전달도 조그마하지만 위문행사를 조출히 마친다.

찬바람이 이는 가을철에는 파주에 있는 『우양의 집』이라는 결핵환자 거처시설을 방문하여 겨울철 연료에 보태라고 위문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벽제근처 토속음식점에 들러 녹두빈대떡을 오추를 얼린히 마시고 오면 심신이 편하기 그지없다.

회원 모두 웃음짓고 만족스런 표정이다. 그러나 연 2회의 불우시설 돕기 행사를 내놓고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여 말석회원인 내가 원손이 한 일, 바른손에 알리는 격이 되었다.

옛것제가 불기 2549년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전국적으로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이 부처"라 하고 자비의 실천을 크게 강조한다. 우리사회의 한 곳에서는 도움이 절실한 시골과 가정이 있다. 연금혜택이라도 받는 우리 경우들의 여러 모임에서 많은 선행을 하고 있었지만 재향경우회의 위상이 점차 정립되어가고 나날이 발전해 가는 요즈음 각종 친목모임과 각급 경우회에서 년에 한 두 번 이런행사를 통하여 경우들의 자비실천이 세상에 조금씩 알려지므로 해서 경우회 발전의 한 지름길이 될 듯 하여 관장사항으로 적어본다.

「경우신문」 원고 모집

- ◎ 時論, 提言
- ◎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 중 그때그때 사회문제화된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논평하여 국민들로 부터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내용
- ◎ 독자의 소리
- ◎ -일상생활을 통하여 보고, 느낀 일 중에서 이것만은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일
- ◎ "이래도 됩니까"
- ◎ -전·현직 누구나 '체면한 '일' 중에서 사회 고발성' 또는'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 (특히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
- ◎ 취미나 건강
- ◎ -노후인생을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즐겨들 속에서 살아가는 독특한 건강비법이나 취미생활
- ◎ 行事, 勳靜, 結婚, 訃告 等
- ◎ -支那, 支倉 행사 또는 동거생 모임이나 경찰제직종 갖게된 각종 모임 소식
- ◎ -회원의 출신계급과 관내·외 거주를 불문하고' 소식과 勳靜을 사진과 함께 송부
- ◎ -결혼, 부음 등은 일시 장소와 회원과의 관계를 명시
- ◎ -경우회의 발전방향이나 경찰과 관련이 있는 내용
- ※ 200자 '원고지' "0매(A4용지 2매)" 內외로 작성하여 경우신문 담당자 앞으로 송고

檢·警 搜查權 조정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